

《 _____ 학생 한권읽기 독서 수행평가 》

하이에듀

도서명 **유튜브 쫘 아는 10대**

1. 자신이 선택한 도서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독서 전후 자신의 진로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요약, 감상을 각각 한 문단으로 하여 전체 글을 2개 문단으로 작성할 것) (300자 이상)

중심 내용 요약)

이 책은 유튜브의 수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장점은 평범한 사람도 개성을 맘껏 펼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허위정보를 생산하기 쉬우며 차별과 혐오를 생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자는 유튜브가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만큼 이용자도 함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한다.

(232자)

진로 의식 변화 및 감상)

미디어학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진 그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영상 매체가 시청자로 하여금 단순히 재미를 유발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단점을 악용하는 판이 펼쳐진 지금, 유튜브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이용하는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가진 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된 미디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48자)

(총 480자)

2. 도서 내용 중 가장 1)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가지를 인용법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이 정보가 가진 2) 개인적, 3) 사회적 효용에 대하여 쓰고 총 1개의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300자 이상)

1)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가지 인용법 사용하여 서술

이 책을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책에서는 메신저나 SNS에서 유포되는 지라시 정보, 언론사에서 쓴 허위 사실의 기사 등은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정보이며, 언론사를 흥내내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한다.

(153자)

2) 개인적 효용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냄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허위정보와 음모론의 차이 또한 알게되면서 모든 정보를 옳은 정보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127자)

3) 사회적 효용

우리 모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음모론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실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서 올바른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133자)

(총 413자)

3. 독서 후 해당 분야와 관련된 최근 시사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논술하시오. (400자 이상)

1) 표현 : 제목의 명료성, 시사 이슈의 출처 밝힐 것, 문단 구분, 타당한 전개

2) 내용 : 시사 이슈에 대한 구체적 설명 (1개 문단),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1개 문단), '독서 내용 - 시사 이슈 - 자신의 생각'의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제목 : 가짜뉴스 법적 처벌 강화, 그 전에 고려할 사항들

시사이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통해 가짜뉴스는 그 영향력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이슈를 접하였다. 기존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근거였던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가짜뉴스를 제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85자)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음모론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 셋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과 조회수의 영향을 받는 미디어 시대에 정보 소비자도 정보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가짜뉴스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급과 수요 관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91자)

(총 476자)

시사이슈 자료 출처_아시아투데이) [인격살인 中] 가짜뉴스 처벌 한계 있어...“강경한 처벌 위한 법안 필요”

내용 :

속임수와 조작 수준의 허위기사, 진실과 거짓, 팩트와 주장을 넘나드는 기사와 정보가 넘쳐나면서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짜뉴스 유포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를 포함한 무고의죄로 재판받는 사례는 738건이다. 이 중 198건은 실형을, 231건은 집행유예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 160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건수에 비해 선고를 마친 재판이 적은 것은 그만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법상 양형 기준과 실제 법원 판결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 혹은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 5년 혹은 벌금 1000만원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짜뉴스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담겨 있기에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면 징역 3년 혹은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징역 7년 혹은 벌금 15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는 징역 3년 혹은 벌금 3000만원, 허위사실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상한선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하게 법적 처벌을 줄 수 있는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현행 규범 체계상 가짜뉴스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낯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를 전면적으로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가짜뉴스에 있어 뉴스의 개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성해 규범화할 필요성이 있고, 확립된 규범적 대응체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7010009565>